

필요광장

만주 벌판을 생각하며



이승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이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남북으로 분열되고, 동서로 다두고, 상하로 나누어 싸우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서 희망을 느낄까?

세월호 철거 정세성을 잃어버리고, 외래 문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이 모습에 적지 않게 실망할지도 모른다. 선조들이 이루고자 했던 나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국가는 지금 이 모습은 아닐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정부와 국가에 실망했다. 분노를 감추지 않고, 마음이 떠나고 있다. 지금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찾아볼 수 없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참회하고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참회해야 한다.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인식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세월호의 불행한 사건은 금전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속에서 일어났다.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방치했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대폭 규제완화를 하는 바람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났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정부는 물신주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인성의 완성과 사랑, 평등과 자유 등이 국민의 최고 가치가 되도록 정치 행정을 도모하였던 15명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10일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민사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의 본질은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의 집행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여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각종 범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 법을 아무리 잘만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법은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 지도층이 술선수범하여 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 사회는 권력과 돈이 있는, 이른바 힘 있는 사람일수록 법을 안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 앞에 평등은 교과서에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사회지도층이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지 않을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국격도 높아지는 것이다. 국격을 높이는 지름길은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국가 개조를 약속했다. 적폐(積弊)를 이번 국회에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적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한민족의 뿌리를 잊어버리고 가르치지 않는 점이다.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이념으로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는 뿌리를 모르고는 나오지 않는다. 자부심과 긍지가 없는데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루빨리 한민족의 건국정신인 홍익인간 사상에 입각한 국훈과 국학을 찾아야 한다. 국훈과 국학의 부활은 한민족 최초의 국가 건국기념일이며 국훈과 국학의 뿌리인 개천절의 준수가 그 첫 걸음이다.

국경일인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성탄절이나 석가탄신일 행사에는 대통령

이 참석하기도 하고 축하메시지는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생일이자 건국기념일에는 그러지 않는다. 나라의 경사스런 5대 국경일 가운데 가장 자랑스런 개천절의 가치를 이렇게 폄하하고 업신여겨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부터 개천절을 최고의 명절로 여기고 거국적인 기념행사를 하여 민족애와 애국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부 부처가 홍익인간 정신을 새기고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 생활하고 교육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물질문명시대를 극복하고 정신문명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근 2000년 간이나 정신문명을 실현했던 찬란한 역사가 있다. 그러한 역사가 홍익인간 정신, 천지인 정신으로 우리의 혈관 속에 맥박치고 있다.

이제 한민족의 심성 속에 숨어 있는 그 정신을 일깨우고 부활시켜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개조라고 믿는다. 저 만주 벌판을 달린 독립투사들이 꿈꾸는 나라가 우리 민족의 중심가치와 철학이 바로 선 나라이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만주 벌판을 생각하며 국민의 마음속에, 세계의 모든 국가 앞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법조칼럼

세월호 재판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각을 해줍니다. 승객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져야함에도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안전만을 도모하였던 15명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10일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민사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의 본질은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의 집행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여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선원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은 매우 차갑습니다. 물론에 찬 사람을 다하여야 희생자들에게 조급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있지 않을까하는생각을 해봅니다. 승객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져야함에도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안전만을 도모하였던 15명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10일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민사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의 본질은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의 집행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여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도 가슴속에 있는 격양된 감정을 표하는 방법일 뿐 헌법에 보장된 권리박탈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놓여져,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없거나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법원에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선원들에게도 국가에서 선정한 국선변호인들이 그들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은 변호사로서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법과 양심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변호할 것이고 그것이 변호인으로서의 책무입니다. 동료변호사로서혹시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변호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최선이 그 자체로 오망이 되고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입니다. 세상에 무가치한 생명이 하나도 없듯이 아무리 비난받을 행동도 한 사람도 자신이 한만큼의 잘못에 대

한 벌을 받아야하고 그러한 과정에 조금이라도 역할함이 없어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사법체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족)에게 보장된 진술권, 기록복사 및 열람권 등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권리 역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열릴 재판에서 변호사들은 한편에서는 피고인들을 위하여, 또 다른 편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절대로 좋고 나쁨을 얘기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두 위치의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온 국민을 슬픔에 빠트린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법에 따른 행동을 하고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프고 참으로 미안한 가정을 해줍니다.

기고

세종대왕의 겸손과 리더십



한국환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

되돌아본다. 세종은 한글 창제 등의 업적외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지만 스스로 무자극자로 항상 겸손했다. 아버지 태종은 왕위를 빨리 물려주고 싶었는데, 이유는 왕자의 난 등으로 형제와 정적 등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늘이 두려웠다고 한다. 한편, 장자 양녕대군은 세자였으나 문란한 생활로 질책을 자주 받아 아버지께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에서 '나만 난봉꾼이었나요? 아버지는 난봉질을 안했나요?' 하며 따졌다고 한다. 그러자 태종은 크게 노해 종격직으로 세자를 폐위하고, 성실한 셋째 충녕에게 세자 자리를 넘겼다. 이때 충녕은 극구 사양했지만 거듭 권하여 세자로 책봉하고 두 달만에 옥새를 넘겨 별안간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세종은 항상 스스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형들에 대한 미안함과 부친 명령에 따른 책임감으로 통치를 했다. 아들이 집권하면 반대세력이 많을 것으로 생각, 세종의 처가까지도 제거하여 왕권 도전을 막을 절뚝던 것이다.

이처럼 세종은 태종의 정치적 환경 조성에 따른 유리한 점도 있었지만 항상 부족함에 대한 겸손, 백성을 잘 섬기지 못하면 하늘의 노함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21세부터 32

년 간 많은 치적으로 태평성대로 평가받지만 개인사를 보면 아주 불행했다. 즉위 4년 동안 부모님과과의 사별로 정치적 고아가 되었고, 아들 문종의 세자비들을 두 차례 내쫓았으며 세 번째 맞이하는 며느리가 공주를 낳았지만 2년 못되어 사망하였다. 이어 단종을 낳았으나 그나마 며느리가 산후조리 중 죽었고, 아들들이 연달아 죽는 등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다. 거기다가 세종은 사냥 등 야외활동보다 독서를 즐겨서인지 몸이 비대했는데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아 40세 전에 앞이 잘 안 보였다고 하며 심한 중기로 놀다가 어려웠으며 걷기 힘들어 치료차 온천에 자주 다녔다고 한다(세종실록).

이렇게 개인사가 아주 불우하여 국정 수행이 어려울 것 같지만 조선시대의 최대의 부흥기로 평가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겸손과 생명존중 및 백성중심, 그리고 참여적 리더십(participative leadership)으로 국정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은 늘 겸손했으며, 당시 실세였던 김종서가 안정된 왕권을 위해 양녕군 등을 제거하기를 간했으나 철저히 형제와는 다름을 피했으며, 백성들이 부당하게 벌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챙겼다고 한다. 실록에 의하면 세종 32년 동안 가뭄이나 태풍이 많았는데, 그 피해

로 백성이 굶어죽었다는 보고를 받으면 수라상의 메뉴도 줄이는 등 철저히 국민과 함께 했고 심한 경우에는 3,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고 하며, 한 번은 의식이 없을 정도로 간절했다고 한다. 또한 여진족의 잦은 침입으로 피해를 보자 군대를 파견하여 압록강, 두만강에 군대를 주둔시키고자 하나 대신들이 반대하자 전국에 방을 붙여 의견을 물어서, 결국 4군과 6진을 설치하여 국경선을 잘 지켰다고 한다. 이처럼 세종은 항상 독단적으로 국정을 처리하지 않고 묻고 토론하며 여러 의견을 들으며 상향에 따라 '참여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순리적으로 다스렸다. 이는 '생각은 깊게 하고 행동은 대답하게 하라'는 '심사고거(深思高舉)'로 소통을 매우 중시한 지도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 의원들은 자신이 지역의 일꾼임을 내세우기 전에 세종의 리더십을 교훈으로 삼고, 국민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하늘을 경외(敬畏)할 줄 알며, 법과 조례에 따라 국민이 맡긴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 갔으면 한다. 물론 리더십은 정치가, 행정가가 갖추어야 할 덕목일 뿐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지만 리더가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력'을 보면 일의 수준과 자질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社說

이제 선거 후유증 털고 지역경제 챙길 때

전국을 내내 달구었던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제는 정치 과잉의 열기에서 벗어나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할 때다.

지금 지역경제의 현실은 암울하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데다 마땅한 일자리도 없다. 청년실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금융권의 자금줄 옥죄기 등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55일째를 맞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우리 경제는 사실상 멈춰서 있다. 애꿎은 어린 생명들의 희생앞에 비통함과 자괴감이 국민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지갑을 닫았고, 기업은 투자를 미뤘다. 나라 밖 시장도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끝을 알기 어렵고,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화 가치 상승과 엔제가 맞물리면

서 일본 기업의 역습도 거세지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회생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혼돈의 그림자가 지역경제 전반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국민의 안전이 최대 화두였다. 당선된 풀뿌리 일꾼들은 하나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야 한다. 일자리 및 세 성장동력 창출, 기업유치, 중소·중견기업 활성화, 골목상권 회생 등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지금은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당선자들은 '위로부터의' 소리나 '입신양명'이 아니라 경제난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아래로부터의' 민심에 귀 기울이고, 공약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를 살피고 지역경제 회생과 주민 안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일당독점’ 지방권력 감시·견제 절실하다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역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거의 싸쓸이하면서 '일당 독점' 구도가 과거보다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은 전남에서도 도지사과 도의회를 사실상 독식해 감시와 견제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광주시의 경우 시장과 5개 구청장 모두 승리를 챙겼고, 전체 22개 의석인 광주시의원도 지역구 19석 전부와 비례대표 2석 등 총 21석을 확보했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구청장 1명, 민주노동당 시의원 2명을 배출한 것과 비교하면 일당 독점 구도가 더욱 견고해진 것이다.

전남도의회도 58개 의석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52석을 차지했고 무소속은 4석,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은 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민

주당이 차지했던 의석은 49개였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에서 새정치연합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한꺼번에 독점하는 일당 지배 구도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세력의 지방권력 독점은 소수파의 목소리를 위축시킴으로써 민의를 왜곡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를 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를 견제할 제도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 주민소환제도 역시 단체장과 의회를 특정정당이 장악한 상황에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독점권력의 폐해를 막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내부 견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절실해 요구된다.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기형적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주민을 위한 성숙한 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선거에서 광주시민들의 '전략적 선택'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 3월 16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였다. 민주당은 당시 당원(50%)과 국민(50%)의 직접 투표로 대선 후보를 뽑는 국민참여경선을 처음 도입해 16개 시·도를 돌며 경선을 진행 중이었다.

광주는 제주, 울산에 이어 3번째 경선지로, 노무현 후보는 7명의 출마자 중 지지율 10% 미만의 군소 후보에 지나지 않았다. 이인제 후보가 대세론으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한화갑 후보가 제주 경선 1위를 바탕으로 1위를 차지해 이인제와 양강 구도로 수도권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광주 경선 결과는 의외였다. 노무현 후보가 득표율 37.9%(595표)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나머지 경선지에서도 '노풍'을 타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민들은 대선론이나 '리틀 DJ'로 불리는 한화갑을 택하는 대신 오랫동안 지역감등 해소를 몸으로 실천해 온 노무현을 택함으로써 지역주의의 망령을 타파하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

다. 이때부터 정치권에서는 판세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광주 유권자들의 성향을 가리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 주 막을 내린 6·4 지방선거에서도 전략적 선택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광주시민들은 박원순의 승부가 예상됐던 광주시장 선거에서 윤창현 후보에게 57.85%의 지지를 보냈다. 김윤태 후보의 득표율(31.77%)을 보다 26%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낙산산 공천'이라는 상대 후보들의 호소에도 광주시민들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전략공천한 안철수의 선택에 힘을 실어줬다. "윤창현이 떨어지면 안철수의 정치생명도 끝난다"는 절박함이 전략적 선택의 배경이 됐다.

시장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한 광주시민들이 기초단체장과 정당 투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5개 구청장과 22명의 시의원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닌 사람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단 1명 뿐이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통해 견제와 힘의 균형을 잡아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